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에 대한**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의견서**

**2022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의견서

**‘인권’이 사라진 행정조직 개편에 반대합니다**

### □ 의 견

1. 부산광역시는 7월 23일, ‘민선 8기 새로운 도시비전 및 목표 실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 행정기구 개편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내용 중, 제14조(행정자치국) 제1항 행정자치국에 “총무과·자치분권과·인사과·협치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를 “총무과·자치분권과·인사과·민생노동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로 개정하여, 기존 민생노동정책국 산하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편제하여 ‘민생노동정책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재편하는 것은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로 이해하려 하였으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인권노동정책과’를 ‘민생노동정책과’로, ‘인권’을 삭제하는 명칭 변경은 민선 8기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시정(市政)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으므로, 현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행정자치국’을 ‘인권행정자치국’으로 개편하고, ‘노동’과 ‘인권’을 독립된 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 □ 이 유

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19년이 지난, 2019년 1월 비로소 부산시에

‘인권’의 이름이 명시된 ‘인권노동정책과’가 만들어져 인권행정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7년이 지난 일로, 전국광역시단위 타시도에 비해 아주 늦은 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인권행정전담부서가 발족한 지 3년 6개월간, 부산시 인권행정은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의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2019년 12월부터 매년 인권주간 지정 및 인권문화제 등 인권행사 개최, 2020년 8월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21년 9월 인권보호관 임용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 등 인권행정이 싹을 틔우고 뿌리내려, 이제 타 시도에서 부산시를 모범적인 사례로 방문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3. 그 결과 지난 7월 전국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의에서 2024년 부산시가 의장도시로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특별히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박형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도시 부산’, 15분 행복도시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개편에서 시장님의 인권철학이 만천하에 공표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과 밀접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 중심 시각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서의 업무와 기능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부서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민생’이란 용어는 ‘민생경제’를 주된 개념으로 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이 포함됨에 따라 경제부시장 산하 부서에 ‘민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현 부서의 소관 업무를 직관적이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인권과 노동을 키워드로 부서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들은 민선 8기의 부산시정에서 도시의 가치와 철학이 튼튼하게 정립되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진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로 자

리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 의견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

위 원 장 정귀순,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부위원장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위 원 구수경, 부산인권포럼 대표

(가나다 순) 김정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태훈,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김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회원)

전병호, 이주민문화센터 센터장

최수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최진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한남식, 부산노숙인시설협회 회장

※ 문의 : 위원장 정귀순

H.P 010-2578-3438 / e-mail: [sangtism@hanmail.net](mailto:sangtism@hanmail.net)